

노동개악 비상!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나서야 한다

“임기 반환점 문재인 정부의 제1
과제는 노동개혁(개악)”

재계와 보수 언론의 이런 주문은
문재인 정부 자신의 다짐이기도 하
다.

조국 사태와 지지율 하락 등 정치
적 위기에 처한 문재인은 기업주들
의 지지를 구하려고 10월 초부터 친
기업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문재인
은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
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개악 입법
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터뜨
리던 재계의 요구에 적극 응답한 것
이다.

지난 한 달여간 문재인의 행보는
거침없다. 10월 4일 경제단체장 간
담회, 8일 국무회의, 17일 경제장관
회의,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
인은 탄력근로제 개악 입법을 강력
히 촉구했다.

10월 10일과 15일에는 각각 삼성
과 현대차를 찾아 재벌 총수들의 기
업 활동 지원을 약속했다. 경제 혁신
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안도 기업 지원에 역점을 두고,
데이터3법과 소재·부품·장비 특
별법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10월 11일에는 2기 경제사회노동
위원회가 출범과 동시에 탄력근로제
개악안을 의결했다.

물론 이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
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악에 반대
한 경사노위 계층별 위원들을 해촉
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 교체하는 불
명예를 감수하고서야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 이는 경사노위가 노동개
악을 위한 ‘답정너’ 기구일 뿐임을 재
확인시켰다.

개악 3중세트

그리고 급기야 10월 21일, 서로 물
어뜯고 싸우던 집권 민주당과 자유
한국당 등이 노동개악 법안들을 신
속히 통과시키기로 전격 합의했다.



국회에서 노동개악 강행 처리가 임
박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쏘아 올
려진 것이다.

지난 수개월간 다른 쟁점을 놓고는
진흙탕 개싸움을 벌이던 민주당과
한국당이 노동자 공격에는 한통속임
을 다시금 보여 줬다.

당면한 노동개악 법안들은 노동자
들의 노동시간, 임금, 단결·행동권
을 공격하는 것들이다.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사용자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줄였다 늘였다
할 수 있는 한도를 크게 늘리는 것.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고 추
가 수당 없이 장시간 노동을 가능케

한다.

●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매년 최
저임금을 결정하기 전에 임금 인상
폭의 구간을 미리 설정하는 사전 단
계를 만드는 것. 최저임금 인상을 억
제해 저임금 노동자들을 고통에 내
몬다.

● **노사관계법 개정:** 노동기본권의 보
장은커녕, 오히려 ILO 기본협약 비
준을 빌미로 사용자들의 요구를 수
용한 것. 사업장 접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노동자들의 저항
권 제약이 핵심 내용이다.

이 같은 개악안들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 파탄을 상징하는 대표 입

법으로 꼽혀 온 것으로, 올해 상반기
부터 노동자들의 상당한 반발을 샀
다.

발목 붙잡는 진영논리

그럼에도 문재인은 한일 갈등과 조
국 사태 국면에서 노동계 대표 조직
들을 정부 지지로 붙잡아 둘 수 있었
다. 우파의 부상을 막으려면 민주당
을 지지해야 한다는 차악론이 노동
운동 내에 퍼진 결과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영논리는 우리
쪽의 저항 태세를 약화시켜 개악을
막는 데도 우파의 부상을 막는 데도
해악적이다.

최근 한 진보계 교수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지
적했다. “역대 민주당 정부가 세 번
집권할 동안 노동권이 점차 후퇴하
게 된 데에는 노동운동이 민주정부
와 자신을 동일시했던 까닭도 있다.”

집권한 민주당은 늘 이전 우파 정
부들이 실패한 노동개악을 마저 완
수하는 구실을 해 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가 정리해고제와
파견제를 밀어붙였고, 노무현 정부
가 손배가압류와 비정규직을 확대했
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가 못다 한
각종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또다
시 패스트트랙 문제 등을 이용해 노
동운동을 붙잡아 두고 정부와의 정
면 충돌을 자제시키려 한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문재인 정부에
단호히 맞서길 주저해서는 안 된다.
패스트트랙이나 강기정 발언 등을
둘러싼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의 갈
등 때문에 노동개악이 지연되길 바
라면서 추후 총선 대응과 연결해 대
응하면 된다고 안일하게 봐서도 안
된다.

세계적인 장기 경제 침체 때문에
노동개악에 대한 한국 지배계급의
의지는 굳건하다.

그 점에서 최근 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두고 민주당과의 공조를 추
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공조하려
는 쟁점이 다르지 않느냐는 것은 형
식적인 접근일 뿐이다. 정부·여당
이 노동자 공격에 힘을 쏟는 상황에
서 국회 의석수 확대라는 의회주의
적 계산법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

투쟁의 타이밍

노동개악이 임박한 지금, 민주노총
은 즉각 실질적 총파업에 나서야 한
다.

10월 21일 여야의 노동개악 추진
합의 직후 노동운동 좌파단체 10곳
이 신속하게 공동 성명을 발표해 민
주노총의 “즉각적 총파업 돌입”을 촉
구했다.

이것은 결코 성마른 투쟁 촉구가
아니었다. 여야가 예고했던 10월
31일 개악 처리가 약간 늦춰지고 있
지 않느냐며 요행을 바라는 것은 효
과적인 저지 투쟁을 어렵게 만들 뿐
이다.

국회에서 개악안 강행 처리는 이미
기정사실로 돼 있다. 정부는 일찌감
치 11월 개악 입법 완료를 못 박았다.
이에 제동을 걸려면 단호하고 과감
하게 저항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파업 일정을 확정
하지 않은 채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 일정에만 촉각을 곤두세워서
는 안 된다.

지나해 최저임금 개악 때도 봤듯
이, 법안심사 소위에서 노동개악안
이 통과되면 바로 다음 날이라도 본
회의에서 강행 처리될 수 있다. 형식
적인 하루 파업이나 항의 집회에 그
쳐서는 개악을 막기 어렵다.

지도부가 국회 일정 쫓기 식이면
조합원들은 지도부가 단호하게 싸울
의지가 있는가 하는 회의감을 느끼
며 투쟁 태세를 갖추기 어렵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금 당장 실질
적인 총파업을 명령하고 실행에 옮
겨야 한다.

박근혜가 못다 한 노동개혁

비정규직 정책 파산

● 비정규직 “제로”는커녕 오히려 증가

지난 1년간 비정규직이 86만 7000명 증가했다. 조사·통계 방식의 변화로 인한 증가분을 제외해도 최소 36만 7000명이나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저질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렸다.

● 무기계약직·자회사를 정규직이라고 사기 치기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실체는 낮은 처우, 여전한 차별, 고용불안을 낳는 무기계약직, 자회사 전환을 정규직이라고 사기 치는 것이었다. 상당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 전환에서조차 제외됐다.(정부 집계로만 봐도 4분의 1만 전환)

더구나 공공부문에 도입한 사전심사제도는 비정규직 채용을 정당화하는 효과만 냈다. 6만 7000명이 새롭게 비정규직으로 채용됐다.

● 확대되는 시간제 일자리

노인의 단기 일자리와 보건의료·사회서비스·교육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대폭 늘었다. 시간제 일자리는 1년 사이 무려 44만 7000명이나 증가했다.

시간제 일자리는 ‘일·가정의 양립’과 여성을 위한 일자리이기는커녕 낮은 임금, 공짜 노동 강요하는 나쁜 일자리다.

● 민간 비정규직은 방치

문재인 정부는 민간 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사실상 기업주 편들기나 해 온 것이다. 심지어 노동부는 기아차 불법파견에 대해 법원 판결보다 못한 시정명령을 내려 노동자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 최저임금 줬다 뺏기, 역대 최저 인상률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산산조각났다. 최저임금 줬다 뺏기 계약으로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더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지금 이 순간 정부는 또 한번의 최저임금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 위험의 외주화로 잇단 산재

고 김용균 씨를 비롯해 건설 현장, 조선소, 제철소, 고속도로, 철로, 우체국, 병원 등 곳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다 병들고 다치고 죽어갔다.

그런데도 정부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생색이나 내더니 더 후퇴한 개악(산안법 하위법령)까지 추진하고 있다.

용역회사에서 간판만 바꿔 단 자회사 방안의 실체

자회사 현실은 용역회사에서 공공기관이 출자한 인력회사로 간판만 바꿔 단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고용에서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 생겼지만, 여전히 커다란 맹점이 있다. 적잖은 자회사들이 모회사의 사정 변경(예산 감소나 미확보, 정부 정책의 변화 등)이나 지회사 노동자 쟁의를 이유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채용도 고용불안을 낳는 요인이다. 최근 인천공항 사측은 이미 자회사에 채용된 노동자들에게 “임시로 고용된 것이며 모두 경쟁채용 대상”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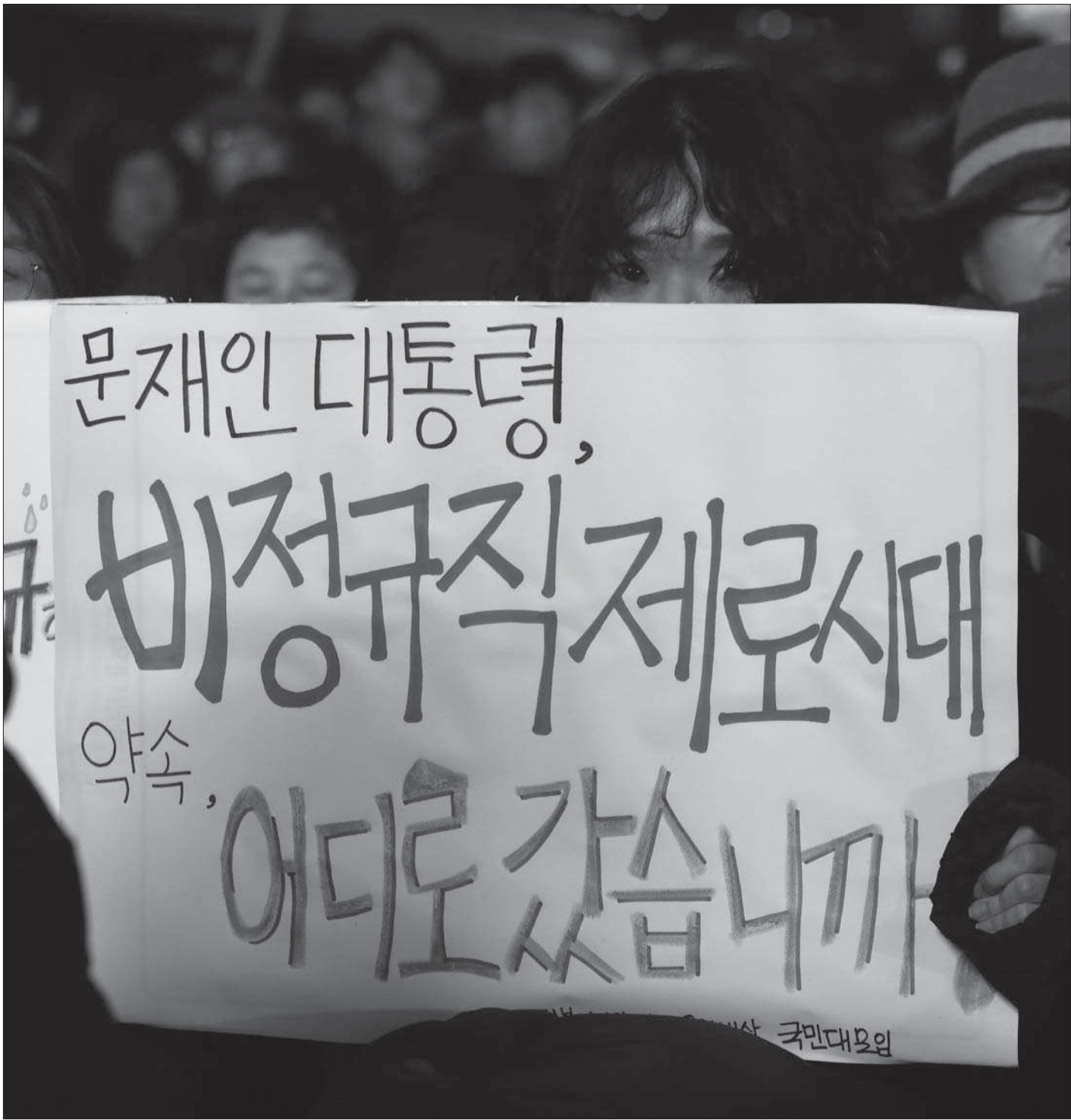
임금과 처우 개선도 미미하다. 신설 자회사의 경우 용역회사 때보다 관리비와 이윤 비중이 증가한 곳이 대부분이다. 그만큼 인건비로 사

용할 수 있는 비용이 줄어든 것이다. 적잖은 자회사들은 정부가 제시한 최저임금 수준의 ‘표준임금체계’(직무급제)를 도입했다.

자회사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더 심하게 제약되고 있다.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이용해 파업권을 제약하는 공격도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2년 만에 자회사의 폐해들이 선명히 드러나면서 자회사 중단과 반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다.

자회사가 상당수 도입된 현 시점에서,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등이 자회사 폐해에 맞서거나 지금도 자회사 수용을 반대하며 싸우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연결하고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11.20 철도 파업 예고

약속 지키라니까 개악 보파리만 풀어 놓는 철도공사와 정부

10월 11~14일 파업 이후에도 철도공사 사측은 정부 승인 없이는 인력 총원과 임금 문제에서 양보할 수 없다며 오히려 개악안을 들이밀고 있다. 비정규직 관련 합의 이행에 대해서도 정규직 쟁의가 끝나야 논의할 수 있다는 식이다.

SRT-KTX 통합에 전혀 의지가 없다. 최근 한 청와대 인사는 철도노조의 만남에서 ‘임기 초 정부가 힘이 있을 때 해야 했는데 지금은 어렵지 않겠냐’고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및 단결권·파업권을 제약하는 노동법 개악, 온갖 규제 완화 등 친기업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사용자들의 불평이 커지자 전임 보수 정당들이 이행하지 못한 노동개혁 완수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사측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교대제 개편(3조2교대→4조2교대)도 인력 총원보다는 기존 인력을 쥐어짜서 해결하려 한다.

노동강도를 대폭 강화할 것이 뻔하다. 철도는 지금도 인력 부족이 심해 공공기관 중 초과근로를 가장 많이 하는 데다 산재 발생 1위다. 최근 밀양역 사고도 인력 부족이 핵심 원인이었다.

철도공사 사측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도 못해 주겠다고 한다. 결국 노동자들은 부족한 임금을 벌충하기 위해 초과근로로 내몰릴 것이다.

임금 문제에서도 사측은 여전히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심지어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개악해 통상임금을 줄이는 개악안도 내놔다.

조건 개선은커녕 개악안 보파리만 풀어 놓는 철도공사와 정부에 맞서 철도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는 것은 정당하다.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은 철도 안전

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정부가 주 52시간제 무력화 등 노동개혁을 밀어붙여 불만이 커지고 있는 때에 정부에 도전하는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은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사회적 관심을 키우고 여론을 유리하게 만들 힘은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해 단호하게 싸울 때 발휘될 수 있다.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들도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함께 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에 정규직과 자회사 노동자들이 함께 파업에 나서면 철도공사가 파업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가 좀 더 어려워져 파업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동의 적에 맞서 함께 싸우는 경험은 단결을 강화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

직무급제는 “동일임금” 미명 아래 추진되는 임금 억제책

문재인 정부는 직무급제 도입을 상당히 진척시키고 있다. 직무급제 도입은 호봉제 비중이 높은 현재의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말만 무성했던 우파 정부 시절에 비해 속도감 있는 직무급 추진을 보여 주는 일들이 지난 1년 새 벌어졌다.

첫째, 정부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자들에게 직무급제를 도입하고 있다. 둘째,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직무별 임금을 공시하겠다고 한다. 직무 분류는 직무급제 설계의 첫 공정이다. 셋째,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추진하면서 직무급제를 적용했다.

임금 차별 정당화

문재인 정부는 직무급제가 임금 차별을 해소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는 임금체계라고 정당화한다.

그러나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들이 마련한 무기계약직 전환자 직무급제를 보면, 그것이 임금 차별 해소는 커녕 해당 노동자들을 저임금에 장기간 묶어 두려는 속셈임을 알 수 있다.

“호봉제 중심의 기존 임금체계 편입



문재인 정부의 직무급제는 임금 차별 유지와 임금 억제를 위한 것이다
7월 3일 파업에 참가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시 급격한 재정부담이 우려된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무기계약직 전환자에게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본심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어쩌구는 진보 색 칠용일 뿐이다. 더 나아가 저임금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된다. 저임금에 고착될 판인테도 차별이 아니란다. ‘당신들의 직무 가치가 낮으니 저임금은 공정하다!’

지금 정부는 하라는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차별) 해소는 외면하고, 애꿎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내의 임금 격차를 부각시키고 있다. 연감생심 정규직 임금을 비교 대상으로 삼을 생각일랑 하지 말라는 뜻이다.

대기업 정규직 임금 후려치기

직무급제 도입이 임금 억제를 노린다는 것은 공공부문 정규직 대상의 직무

급제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직무급제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직무급제 도입의 목표 하나는 현재 임금 체계의 연공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사용자들의 임금 부담 증가를 줄여 주려는 것이다.

실제로, 직무급제가 도입되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기본급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직무급은 직무 등급 내 임금 상한선을 뒤 임금 상승을 억제하기 쉽고 상위 직무 등급으로 올라가기도 어렵다.

직무급제 도입의 또 다른 목표는 사용자들이 보기에 지나치게 높은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후려치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직무급제는 기존 자동차 노동자 임금의 반값 수준으로, 그런 구실을 잘 보여 준다.

노동조합이 저항에 나서야

임금 억제 말고도 정부와 사용자들이 직무급제를 도입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더 있다. 직무급제는 관리자들의 현장 통제력을 강화하는(직무 평가에 따른 줄세우기) 반면,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

과 분열을 부추겨 현장 노동자의 힘을 약화시킨다.

온건파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정부·사용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더 나은 직무급 모델을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직무급 임금 체계 그 자체로 임금 차별 해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처음 보장된 것은 100년 전이었지만(1919년 베르사이유조약),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조차 남녀 임금 격차가 의미 있게 줄어든 것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분출한 노동자 파업과 동일임금 쟁취 투쟁 덕분이었다.

장기 경제 침체에 빠진 정부와 사용자들은 비정규직과 여성에게 동일임금 주기를 어떻게든 피하려 할 것이다. 정규직 임금 억제에는 사활을 걸고 달려들 것이다.

지금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여성들은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조직화에 나서고 있다. 그 힘을 투쟁에 사용할 때만, 정규직 비정규직이 단결해 투쟁할 때만 차별을 해소하고 임금 수준을 지킬 수 있다.

군산형 일자리: 5년간 단체교섭 유예로 임금 억제하기

10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이 열렸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5월 폐쇄된 한국GM 군산공장 부지와 새만금 산업단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2022년까지 일자리 1900여 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이 사업은 양질의 일자리 확대나 “상생”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임금, 조건 억제가 목표다.

군산형 일자리는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상생협의회’에서 임금 상승률을 결정해 노사에 통보한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도 도입하기로 했다. 노사 간에 이견이 발생해도 생산 개시 후 5년간은 상생협의회의 ‘조정’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올해 1월에 체결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서 그랬던 것처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약해 저임금·저질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게다가 전라북도도는 노사가 협약을 어길 경우 지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해 뒀다. 상생은커녕 노동자들이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 “지방정부가 나서서 폐업하고 일자리를 날려버리겠

다”(금속노조 성명)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자화자찬과 달리, 노사민정 협력은 겉치레에 불과하고 실상은 기업의 수익성 보전을 위한 ‘산업정책’이라는 점도 드러났다. 최근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은 애초에 약속된 노동이사제를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참여는 부적절

그 점에서, 노동계의 일부가 이번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두고 ‘노동자 이사회 참관제’를 주요 성과로 내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 노동이사 한두 명의 이사회 참관으로 노동조건을 방어하기 어려울뿐더러, 광주형 일자리에서처럼 이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군산형 일자리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옳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민주노총 군산지부가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

로 군산시 경제와 일자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본 듯하다.

그러나 저질 일자리 확대에 협력하는 것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앞으로 그곳에서 일하게 될 노동자들은 물론, 지역과 전체 노동자들의 조건을 악화시키는 지렛대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기본권을 5년간이나 제약하는 데 합의한 것은 전반적인 임금·조건 하향평준화에 사실상 눈감아 줄 수 있다고 밝힌 셈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는 한국GM에 8000억 원을 지원하면서도 군산공장 폐쇄를 지원했다. 이런 돈을 부도기업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거나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개악, 탄력근로제 확대 등으로 저임금 일자리 양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전반적인 친기업·반노동 정책에 맞서야만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 확대도 가능할 것이다.

김용균 1주기 죽음의 발전소는 그대로

오는 12월 10일은 발전소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스물네 살 꽃다운 나이에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의 1주기다.

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죽음은 ‘위험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문제, 저질 일자리로 내몰리는 청년들의 현실을 밝히 드러냈다.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자본주의 이윤 체제의 비정함도 드러났다. 그래서 지난 겨울 전국 각지에서 김용균 씨 사망을 애도하며 그의 죽음에 항의하는 운동이 벌어졌다.

8월 19일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조사 결과와 함께 권고안 22개를 발표했다. 정부는 ‘특조위 권고안이 나오면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1년 간 문재인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민영화·외주화 철회는커녕 민간기업(포스코, GS, SK 등)의 석탄발전소 확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미세먼지를 줄인다면 폐쇄 예정인 노후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대책도 없으면서 말이다.

하청업체들은 여전히 노무비를 40퍼센트나 착복하고 있다.

발전소 최대 하청업체인 한전산업개발 사측은 정규직 전환 시 “기업 가치 [가] 하락”된다고, 노·사·전문가협의체 위원들에게 손해배상과 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협박 공문을 보냈다.

문재인 정부는 김용균 씨 죽음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산안법을 ‘김용균 법’이라고 생색냈지만, 개정된 법은 발전소를 비롯한 대부분의 업무들을 외주화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산안법 시행령(안)을 더한층 후퇴시켜, 매우 제한적이던 외주화 금지 범위를 더 축소하고 원청 책임 강화 대상에서 온갖 업종과 설비를 제외했다.

김용균 씨의 동료인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동자들은 11월 11일부터 문재인 정부에 특조위 권고안 이행을 촉구하며 광화문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1년이 되도록 해결된 것 하나 없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노동개악과 세월호 수사

개악은 보증수표, 개혁은 부도수표

조국 사태로 정치적 위기가 심해져 지자 문재인 정부가 선택한 길은 전광석화처럼 조국을 사퇴시키고 친기업 행보를 노골화하는 것이었다.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은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조국 인사는 결과적으로 실패라며 “윤석열 총장이 독립적으로 잘하고 있다 ...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했다”고 말했다.

조국 정국에서 재계는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대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데, 정부가 분명하게 기업 살리기 조치들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후 문재인은 선거제도 개혁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친기업 행보를 가속화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문재인, 민주당 당대표 이회찬 등은 부지런히 경제단체들과 삼성, 현대, IT 기업들을 직접 방문해 격려했다.

아마 조국 사퇴 이후 문재인 지지율이 조금 회복되고 한국당 지지율이 다시 떨어진 주요인은, 삼청교육대 운운하는 박찬주 영입 시도 같은 한국당의 헛발질 탓도 있겠지만 바로 문재인이 친기업 행보로 중도우파층을 달랬기 때문일 것이다.

줄타기

이처럼, 문재인은 여전히 진보 염원 노동자·서민층과 사용자·우파 사이에서 줄타기하면서도 실천으로는 좀더 친사용자 쪽으로 가고 있다.

노동기본권을 담은 ILO 기본협약 비준 목록에 노동조합법 개악을 포함시킨 것이 전형적인 사례다. ILO 협약 비준의 반대급부로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사용자 대항권”은 투쟁의 관점에서 보면, 협약 비준 효과를 상쇄시키고 노동조합 운동에 더 큰 제약을 씌우는 악법이다.



다정다감 문재인이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인 정의선에게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10월 15일 경기도 화성 현대차 남양연구소)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위태로우면서도 아직 레임덕 위기로 가지 않은 것은 노동계 지도자들이 민주당 차악론과 진영 논리에 갇혀 민주당 정부를 사실상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여름에는 지소미아 연장 거부 같은 항일 제스처, 검찰 개혁 같은 포퓰리즘 소재들이 그런 구실을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나마 포퓰리즘적 환상을 심어 줬던 항일 제스처 정치에서도 한발 물러서고 있다.

문재인은 국무총리 이낙연을 보내 일본 총리 아베를 만나게 하더니, 이번엔 아세안 회의에서 자기가 직접 아베

소매를 잡아 끌며 억지준항식 정상회담(면담?)을 했다.

문재인 취임 후 첫 대일 특사였던 문희상은 국회의장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해 위안부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한·일의 민간 자금을 모아 보상하자는 황당한 제안을 했다. 문희상의 제안은 일본 정부에게 퇴짜를 맞았다.

손상된 동맹을 복원할 사전정치 작업으로 보이는 이런 행동들의 목적은 노동개악과 마찬가지로 우파와 사용자 계급을 달래는 것이고, 그 효과는 이들의 기를 살리는 것이다.

박근혜도 어깨 수술과 회복을 이유

로 강남성모병원 VIP 병동 1인실에서 두 달째 지내고 있다. 적폐 청산의 초점 이던 두 우파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고령·병환을 이유로 감옥을 나와 있는 셈이다. 뇌물죄로 구속됐던 재벌 총수들은 진작에 풀려나 활개를 치고 있다.

누구의 지지인가

문재인이 조국을 사퇴시키고 친기업·친우파 기조를 분명히 하자 여론조사들에서 문재인 지지를 하락세(와 한국당 상승세)가 “일단 멈춤”했다. 문재인이 지금 누구의 지지를 받아서 정권을 유지하는지를 보여 준다.

그럼에도 여전히 문재인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다. 게다가 부정평가는 보수 ‘빅 텐트’를 모색하는 우파 야당들의 지지를 합계보다 높다. 진정한 여론은 문재인 대 한국당으로 양극화돼 있지 않음을 보여 준다.

‘민주당 대 한국당’ 진영 논리로 정세를 보는 것이 지나치게 단순한 이미지인 이유다. 이런 상황은 조국 수호를 정권 수호와 등치시켰던 문재인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진영 논리에 빠져 계급 불평등과 계급투쟁 문제를 등한시한 노동계·진보 지도자 일부를 꽤 민망하게 만들고 있다.



노동자 연대 최신회 주요기사

- ▶ 해외 마르크스주의자 방한 강연 SNS 시대에도 혁명적 종이 신문이 필요할까?
- ▶ 문재인 정부의 직무급제 “동일임금” 미명 아래 추진되는 임금 억제책
- ▶ 올해 노동자 투쟁은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제시하는가?
- ▶ 문재인 정부, 개악은 보증수표 개혁은 부도수표
- ▶ 칠레, 홍콩, 카탈루냐, 레바논... 세계적 위기는 세계적 반란을 추동하고 있다
- ▶ 비정규직 정책 파산
- ▶ 철도 파업 예고

전국노동자대회장에 있는 <노동자 연대> 부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구독기간 ☐ 1년 50,000원
☐ 2년 100,000원
☐ 2년 이상 ()년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
 · 010-6491-2792
 · ws@wspaper.org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